

 인천광역시		보도자료		경 추 재외동포청 개청
		배포일자	2023년 6월 9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여성정책과	담당자	• 여성권익담당 김문숙 ☎440-2756 • 담당자 조이주 ☎440-2759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 확대
- 전국 지자체 최초, 정부 지원 못 받는 퇴소자들에게도 5백만 원 지원 -
- 4개월 이상 시설에서 보호받은 19세 이상자로 확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전액 시비 자립지원금을 6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.

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충족조건(▲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▲1년이 경과 ▲만 19세 이상 퇴소)이 될 때,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 따라서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,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.

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2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,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는 총 42명이었고, 이들은 모두 친족 성폭행으로 시설에 입소했다. 그러나 그중 5명(12%)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으며, 지원금은 보증금, 대학 등록금, 월세 등

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 기준을 넓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,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입소 연령 제한 없이,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

※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기준

구 분	정부(여성가족부)	인천시	비 고
입소연령	19세 미만	나이제한 없음	
시설 보호기간	1년 이상	4개월 이상	
퇴소연령	만19세 이상	만19세 이상	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가족과 분리돼 홀로 서야 하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” 고 말했다.